2022.12.

국회예산정책처 I 재정동향&이슈 I 제21호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외 8건

해외재정동향 |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일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 재정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02-6788-37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 재정동향&이슈

Fiscal Trends & Issues

2022년 Vol. 3 통권 제21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총수입·총지출 / 4

재정수지 / 5

국가채무 / 6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 10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 15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18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발표 / 22

방위산업 수출 최신 동향 / 25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 29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 32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발표 / 35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 4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 44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 발표 / 48

해외재정동향 / 53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57

일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6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22년도 9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0.9조원 증가한 483.2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6.6%p 감소한 79.3%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금수입이 3.7조원 감소한 반면,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각각 43.1조원, 1.4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2년도 9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4조원 증가한 536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한 78.9%

-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지출 및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2.5조원 증가, 기금 지출은 34.5조원 증가

2021·2022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9월 (누계, B)	진도율 (C=B/A)	2차 추경 (D)	9월 (당월)	9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514.6**	**570.5**	**442.4**	**86.0**	**609.1**	**44.6**	**483.2**	**79.3**	**40.9**	**△6.6**
• 국세수입	314.3	344.1	274.5	87.3	396.6	28.3	317.6	80.1	43.1	△7.3
• 세외수입	29.3	30.5	22.2	75.8	28.3	1.6	23.6	83.3	1.4	7.5
• 기금수입	171.0	195.8	145.6	85.1	184.1	14.7	141.9	77.1	△3.7	△8.1
(사회보장성기금)[1]	99.5	124.5	94.3	94.8	104.8	10.2	89.3	85.2	△4.9	△9.5
◆ 총지출	**604.9**	**601.0**	**472.0**	**78.0**	**679.5**	**46.7**	**536.0**	**78.9**	**64.0**	**0.8**
• 예산	409.7	398.9	321.6	78.5	449.8	29.8	342.2	76.1	20.6	△2.4
- 일반회계	348.8	339.7	273.3	78.4	388.2	26.9	295.9	76.2	22.5	△2.1
- 특별회계	60.9	59.1	48.2	79.2	61.6	2.9	46.3	75.1	△2.0	△4.1
• 기금	195.2	199.6	148.1	75.9	229.7	16.9	182.6	79.5	34.5	3.6
(사회보장성기금)	63.2	64.4	49.2	77.8	64.4	5.8	50.3	78.0	1.1	0.2
• 세입세출외	-	2.6	2.4	-	-	0.0	11.2	-	8.9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2022. 11.)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2년도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3.1조원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8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17.1조원 확대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0.9조원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64조원)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연말까지 제2회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내에서 관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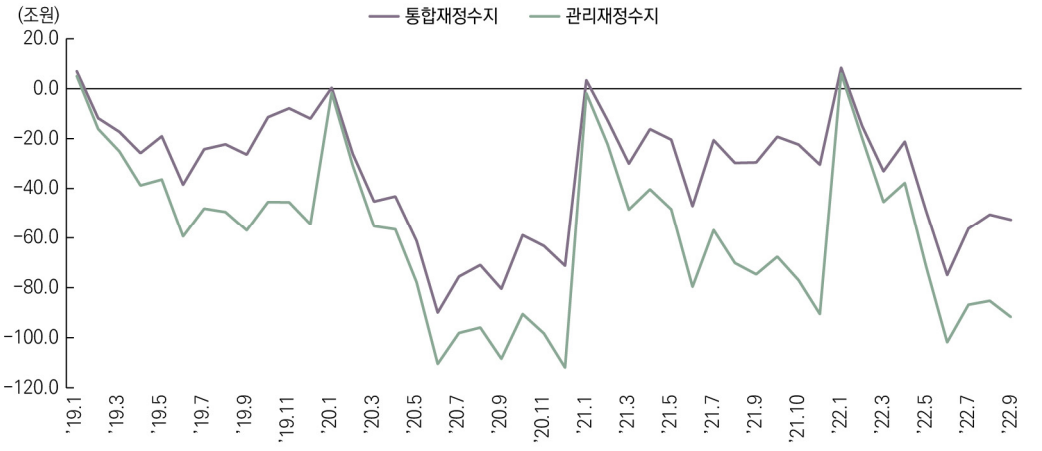
2021 · 2022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9월 (누계, B)	진도율 (C=B/A)	2차 추경 (D)	9월 (당월)	9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514.6	570.5	442.4	86.0	609.1	44.6	483.2	79.3	40.9	△6.6
◆ 총지출(B)	604.9	601.0	472.0	78.0	679.5	46.7	536.0	78.9	64.0	0.8
◆ **통합재정수지(C=A-B)**	**△90.3**	**△30.5**	**△29.6**	**-**	**△70.4**	**△2.1**	**△52.7**	**-**	**△23.1**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36.2	60.1	45.0	-	40.4	4.4	39.1	-	△6.0	-
◆ **관리재정수지(E=C-D)**	**△126.6**	**△90.6**	**△74.7**	**-**	**△110.8**	**△6.5**	**△91.8**	**-**	**△17.1**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2022. 11.)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2022. 11.)

국가채무

2022년도 9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29.1조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939.1조원 대비 90조원 증가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1)]은 2021년 45.3%로, 2020년 42.2% 대비 3.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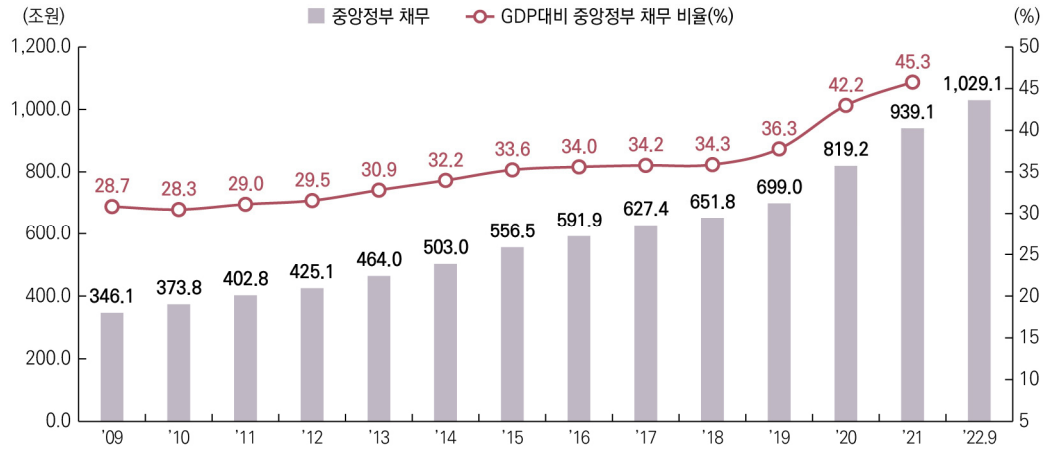
2020~2022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잠정)		
	결산	결산(A)	2차 추경	9월(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819.2**	**939.1**	**1,037.7**	**1,029.1**	**90.0**
• 국채[1)]	815.2	937.0	1,035.8	1,027.0	90.0
- 국고채권	726.8	843.7	937.5	931.4	87.7
- 국민주택채권	78.9	82.2	85.9	82.6	0.4
- 외평채권(외화)	9.5	11.2	12.3	13.1	1.9
• 차입금	3.3	2.0	1.9	2.0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7	0.1	0.1	0.1	0.0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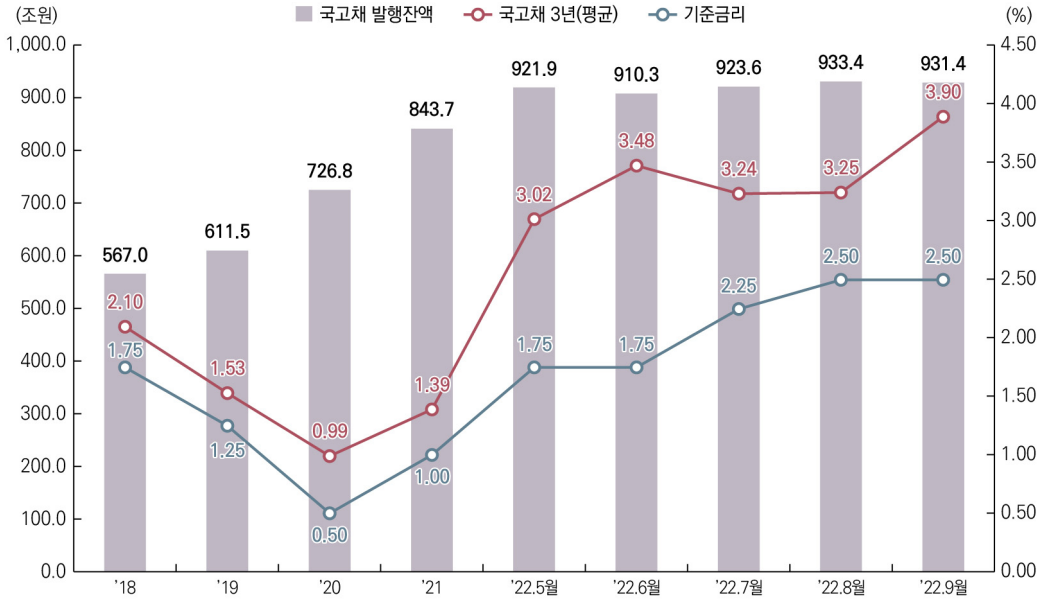
1) 2022년의 경우, GDP가 확정되지 않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

2022년도 9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931.4조원으로, 2021년말 843.7조원 대비 87.7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최하점(0.99%)을 기록한 후,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6월 기준 3.48%까지 상승하였으나,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022년 7월 기준 3.2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2022년 9월 기준 3.90%까지 반등

-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0.50%로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2년 9월 기준 2.50%로 상승 추세를 지속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회예산분석과 이선화 예산분석관(02-6788-4635)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발표
- 방위산업 수출 최신 동향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발표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 발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경과

- 정부는 2022년 5월 31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10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편의상 '결산'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포함하여 설명함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경과

구 분	일 자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2022. 5. 31.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 2022. 7. 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8. 29.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상임위원회 : 2022. 8. 17. ~ 9.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8. 29.
결산 의결	- 상임위원회 : 2022. 8. 19. ~ 9. 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11. 7. - 본회의 : 2022. 11. 10.

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심사하였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시정요구사항

- 국회는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
  -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이 있음

-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1,394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22건 등 총 1,41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1)]
  -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944건, 주의 457건, 시정 79건임(중복 64건)
  - 상임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159건), 행정안전위원회(13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6건), 법제사법위원회(134건), 국토교통위원회(131건) 순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유형별 시정요구사항

(단위: 건)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회운영	-	-	-	13	32	(1)	44
법제사법	-	-	9	41	91	(7)	134
정 무	-	-	10	13	39	(3)	59
기획재정	-	-	-	6	34	-	40
교 육	-	-	3	11	28	(4)	3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3	20	(1)	22
외교통일	-	-	5	44	51	-	100
국 방	-	-	19	41	31	(3)	88
행정안전	-	-	3	78	62	(5)	138
문화체육관광	-	-	7	26	51	(2)	8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	28	116	(8)	13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2	11	119	(3)	129
보건복지	-	-	3	26	89	(7)	111
환경노동	-	-	4	74	91	(10)	159
국토교통	-	-	14	42	85	(10)	131
여성가족	-	-	-	-	3	-	3
공 통	-	-	-	-	2	-	2
합 계	-	-	79	457	944	(64)	1,416

주: 1. (중복) 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예: 시정 및 제도개선)
2.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22건) 별도
3. '공통'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난 다부처 관련 사항임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과거 시정요구사항: (2018회계연도) 1,356건 → (2019회계연도) 1,667건 → (2020회계연도) 1,881건

2021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 상임위원회별 주요 시정요구사항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유 형
국회운영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집행을 적극 도모할 것	제도개선
법제사법	•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법률구조 · 국가송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업무인 법률구조 · 국가송무 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제도개선
정무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또는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교육	•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시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단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단을 통폐합할 것	제도개선
외교통일	• 외교부는 향후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보다 철저히 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국가 확대 및 행사방식 변경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국방	•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과 장병의 급식만족도 간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집행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면 조기 반환 또는 재투자를 통해 시급한 재난 수요에 활용되도록 하며, 재원지원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을 재점검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충분한 쌀값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작물 재배 유도, 쌀가루용 분질미 재배 등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며, 해외원조 등 여건이 조성되면 쌀 원조 계획을 준비하고, 3년 이상 된 비축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쌀 수매 비중을 늘리고, 농협의 노후화된 쌀 창고 개보수 및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에너지 R&D의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기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제도개선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종료되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지원은 지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	제도개선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고용 위기 상황에서의 예산편성 시 일자리의 질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유 형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실 문제 해소를 위하여 면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면적별·지역별 공급계획을 수립·개선할 것	제도개선
여성가족	•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광역지원센터 미지정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 연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향후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공통사항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기금전입금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의 예산 편성 및 실제 징수결정·수납 부처를 일원화할 것	제도개선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 국회는 결산심사 결과 재정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외에도 국회 심사절차 또는 정부 정책 등에 관하여 정부의 주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함
- 국회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다중채무자·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주요 부대의견

연 번	부대의견
1	•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및 세목조정, 기금 자체변경, 불용예상액 활용, 비목 신설 등을 통회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는다.
4	• 정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확대 지원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5	• 정부는 다중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12	• 국방부는 「학교급식법」 등을 참조하여 군 급식에 우수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 및 특별공급 체계 등을 통해 접경지역 농어민의 군 급식 재료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7	•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19	•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 '연번'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상의 부대의견 순서를 의미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고려사항

-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심사 결과와 예산안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요구 등 예산규모의 조정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이 총 2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당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의 예산규모 조정 관련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 분	건 수
집행과정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요구	61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요구	109
사업성과 저조에 따른 예산 조정 요구	18
관련 법령 미비 · 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예산 조정 요구	82
합 계	270

예산분석총괄과 김윤성 예산분석관(02-6788-4623)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2022. 11. 4.)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10.27.)의 후속조치로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
-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 3분기 들어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경제 여건 급변으로 투자심리 위축
  - 2017~2021년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의 출자로 29.8조원의 벤처펀드가 결성되었으나, 2022년 3분기 벤처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388억원이 감소
- 민간 벤처투자 유인구조 부족으로 인해 자생적 성장이 제약
  -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외연은 확장되었으나, 2021년도 전체 벤처펀드 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성된 펀드는 5.9조원으로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64%에 달함
  - 정책 모펀드, 민간 모펀드가 함께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해외 벤처 선진국의 투자 생태계와 대조 (미국 등 7개국에서는 민간 모펀드 22개가 조성)
  - 해외 벤처캐피탈[1] 투자는 정체

    * 해외 VC 글로벌펀드의 국내 투자액(억원): ('19) 1,173 → ('20) 1,094 → ('21) 804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 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등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구 분	내 용
정책방향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성과목표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 ('17~'21년 평균 6조원 → '22~'26년 평균 8조원)
핵심전략	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②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③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④ 선진적인 벤처금융기법 도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022.11.4.)

1)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이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의미(출처: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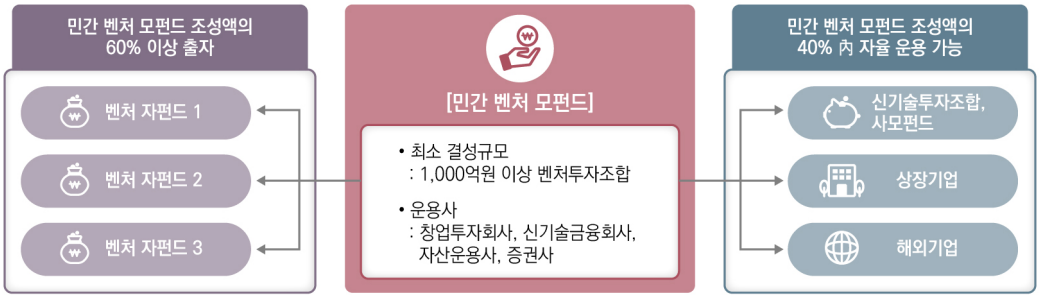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주요 내용

- (전략 1)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지원
  -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가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연차별 기준 투자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기준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관리보수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손실 발생 시 민간출자자에 우선하여 모태펀드가 손실을 충당하는 비율을 상향(모태펀드 출자금의 10% → 15%)
  - (중·소형 VC 펀드결성 지원 확대) 정부 모태펀드의 루키리그* 출자분야를 확대(창업초기 → 창업초기, 청년, 특화 산업분야 등) 하고, 투자 대상을 운용사가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루키리그를 신설하며, 중·소형 펀드에는 대형펀드보다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높여 차등 출자

    * 루키리그: 특정 업력(등록 3년 이내)·운용자산 규모(총 운용자산 500억원 미만) 수준을 모두 충족한 벤처캐피탈만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한 모태펀드 출자 분야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세컨더리 벤처펀드* 출자 목적의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허용

    * 세컨더리 벤처펀드: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일반세컨더리펀드)하거나 벤처펀드의 LP[2]지분을 거래(LP지분유동화펀드)하는 펀드
- (전략 2)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의 개별 자펀드에 투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펀드 출자자 지분 유동화를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구조(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022.11.4.)

2) LP(limited partnerships)는 벤처펀드(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로서,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을 의미. 참고로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ship)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P, limited partnerships)으로 구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2)

-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기능 정립)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모태펀드는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정책적 지원 분야 중심으로 투자

● (전략 3)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자본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벤처캐피탈이 해외 출자자를 모집하여 조성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3년 말까지 누적 8조원(2021년 말 4.9조원) 이상 조성하고, 중동, 유럽 지역 정책펀드 운용기관, 국제기구 등의 공동출자펀드 확대 조성 및 벤처·스타트업 해외진출 협력 강화
- (해외-국내 VC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해외 투자거점으로서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3] 국내 VC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VC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4]추진
- (해외 VC-모태펀드 협업을 통한 대규모 후속 해외투자 유치)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내 스타트업(Single portfolio)에 대규모 후속투자하는 해외 VC「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펀드」신설

● (전략 4)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 초기 투자 지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후속투자 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
-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 초기 투자 이후 지원) 금융기관은 융자 담보로 신주인수권을 받고,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허용 : 후기 투자 지원)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 마련

※ 현행 벤처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및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논의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5]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및 그 인센티브로서 세제혜택을 제시하였으나, 민간 벤처모펀드의 결성·등록·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도 병행되어야 함
-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은「상법」및「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이 아니므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김태민 예산분석관(02-6788-4629)

3) 미국 실리콘밸리('13.8월), 중국 상해('14.6월), 싱가포르('15.9월) → 유럽('23년 내) 추가
4) IR(investor relations)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 및 홍보 활동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출처: 위키백과)
5) 참고로 민간 벤처모펀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616)」과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벤처투자방식을 확대하려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17)」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정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2022.10. 26.)

- (추진배경)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 및 금리 급등으로 이들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분양 당첨기회를 제공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주거 안정은 학업·혼인·자녀계획 등 생애설계의 기초로서, 집값 상승 시 출산·혼인율 감소
  -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과 서민층에게는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 이들에게 공공분양주택 청약기회를 제공할 필요

  ※ 선호하는 내집마련 계획(청년대상 설문조사, 2022.10.): 임대거주 후 분양 50.6%, 초기 자본마련 후 분양 45.1%, 임대주택 계속 거주 4.3%

- (주요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
  -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사업을 구체화
  - 향후 5년간('23~'27) 과거 5년간('18~'22) 공급물량 14.7만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총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층에 약 34만호, 청년 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에 약 16만호 공급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단위: 만호)

구 분	합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
2018~2022 (실적)	14.7	0	8.0	2.1	4.6
		청년층 약 9.7만호		청년 外 약 5만호	
2023~2027 (목표)	50.0	5.25	15.5	11.25	18
		청년층 약 34만호		청년 外 약 16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 서울 6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약 36만호, 비수도권에 약 14만호 공급
- 그동안 도시외곽·공공택지 위주로 공급해 왔으나, 지하철,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 확보

지역별·연도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

(단위: 만호)

구 분	연도별 공급계획 (인허가 기준)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수도권	35.6	5.2	6.0	7.0	7.4	10.0
서울	6.0	0.5	0.5	1.3	1.7	2.0
비수도권	14.4	2.4	3.0	3.0	3.0	3.0
합 계	50.0	7.6	9.0	10.0	10.4	13.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세부 추진방향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소득·자산·생애주기 등 개인별 여건에 맞게 3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

공공분양주택 유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자료: 국토교통부

- **나눔형**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

  ※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함

  ※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은 7천만원 수준

나눔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구 분	주택가격	분양가격	대출가능 금액	초기부담
나눔형	5억원	3.5억원	2.8억원	7천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 **선택형**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되,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가능하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의 선택기회 확대

- **일반형**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 적용 모델
  - 향후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

● 전용 모기지(mortgage) 지원

-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
  -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
  - 선택형은 입주 시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시 최대 5억원 한도·40년 만기의 저리 모기지 지원
  - 일반형의 경우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통해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유형별 모기지 지원 내용

구 분	한 도	금 리	만 기
나눔형	5억원 (LTV 최대 80%)	1.9%~3.0%	40년
선택형	5억원 (LTV 최대 80%) * 임대 보증금 80% 전세대출 별도지원	1.9%~3.0% * 전세대출: 1.7~2.6%	40년 * 임대기간 중
일반형	4억원 (LTV 70%)	2.15%~3.0%	30년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 추진 시 고려사항

-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연차별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청년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주택 공급 입지 및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말까지의 사전청약 시범단지 물량은 약 1만 1,000호로 2023년도 공급계획 물량 7만 6,000호 대비 7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대상 부지를 차질 없이 발굴·확보할 필요
  - 주택공급 입지 선정 시 주거면적, 학교나 직장과의 근접성, 주거비 부담 등 청년 등의 주거수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공급 지역 및 유형을 설정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남명진 예산분석관(02-6788-463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발표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확정 · 고시 (2022. 9. 27.)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1]에 따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발표
  - 교통약자[2]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 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 시행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하여 마련
- 동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의 4개 추진전략 및 9개 정책과제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1.)으로, 2021년말 기준 전체 인구(5,164만명)의 약 30%인 1,550만명이 교통약자로 파악되며,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885만명, 어린이 322만명, 영유아동반자 194만명, 장애인 124만명, 임산부 26만명으로 나타남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요 내용

● 동 계획에 따르면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약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단위: 억원)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1,118	2,309	2,667	2,707	2,767	11,568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992	1,940	2,025	2,065	2,125	9,14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126	369	642	642	642	2,421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134	150	133	133	133	683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132	148	131	131	131	67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1]	-	-	-	-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2]	2	2	2	2	2	10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6	5	5	5	21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1	-	-	-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	5	5	5	5	20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1	4	3	4	12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	-	2	-	-	2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	1	2	3	4	10

주: 1)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를 활용하고, 해운조합 자체예산으로 수행할 예정
2)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사업예산(2억원) 외 철도·공항 자체 예산 등으로 추진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략 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대상 노선버스[3]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023.1.~),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운영 확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특별교통수단[4]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 구축,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3)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대상 노선버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임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8.)

- (전략 2)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육상-해상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5] 개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 수준 평가 및 제공, 휠체어 이용자 이용가능 선박안내 기능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데이터기반 교통약자 이동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 조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
- (전략 3)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광역(시·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등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비
- (전략 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운수종사자(승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교통복지협의체를 통한 교통약자 배려문화 조성

추진 시 고려사항

-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
  - 제3차 증진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및 저상버스 보급률 등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6] 4차 계획 추진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산업예산분석과 박나경 예산분석관(02-6788-4631)

5) 기준적합 설치율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의미
6) 전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는 80.1%였으나, 2021년 실적은 78.4%로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목표 42.0%에 미달한 30.6%를 달성

방위산업 수출 최신 동향

2022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관련 현황

- 2022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불 규모를 달성
  -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0억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1년 70억불로 실적이 크게 증가함
  -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불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월 이집트(K-9 자주포, 17억불)에 이어 8월~11월 폴란드(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124억불) 등의 수출 계약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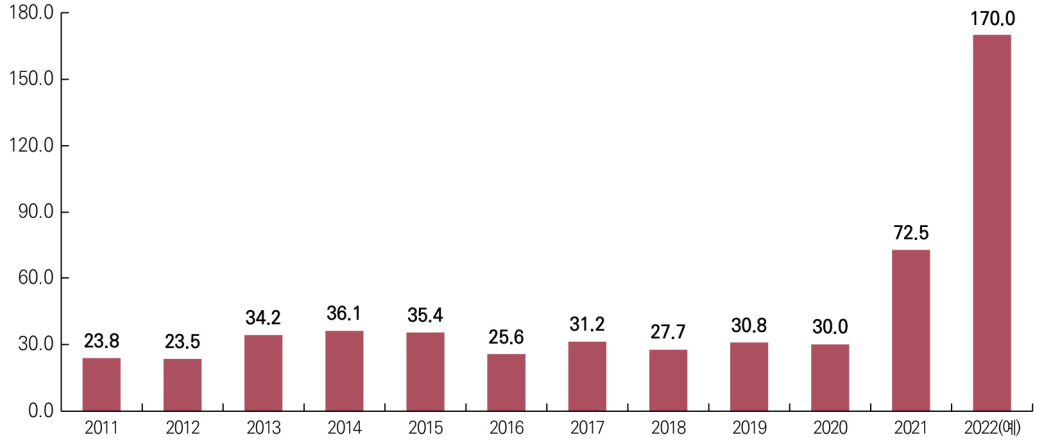
※ 폴란드와 체결한 124억불의 계약 규모는 최근(11월 4일) 천무 1차 이행계약에 더해 지난 8월 26일에 체결한 K-2 전차 및 K-9 자주포 1차 이행계약, 9월 16일에 체결한 FA-50 전투기의 이행계약 수주액을 전부 합한 금액임

※ 이와 같은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규모는, 연간 50억불 내외인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규모를 초과한 것임

  - 방위사업청은 2023년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2차 이행계약과 호주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 K-2 전차 등의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평균 100억불 수준의 수출을 지속 유지하여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

2011년~2022년의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현황

(단위: 억불)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현황(2010~2022년)

구 분	주요 수출 품목	주요 수출 국가
화력	K-9 자주포, 권총탄, 탄약류 등	미국, 핀란드,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라, 호주, 이집트 등
항공	KT-1 기본훈련기, KA-1,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등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태국, 이라크, 세네갈, 필리핀, 폴란드 등
함정	1,400톤급 잠수함, 전투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해안경비정, 함정전투체계 등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영국,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등
유도	천궁-II, 현궁, 해성, 천무 등	아랍에미리트 등
기동	장갑차, K-2 전차, 군용차, 파워팩 등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폴란드 등
부품/기타	전원공급기, F-15 전투기 창정비, F-15 전방시현장비, 브래킷, 함포 부품, 현수장치, 케이블, 광학 부품 등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자료: 방위사업청

향후 방산수출 유망 품목 현황(2023년~)

품 목	대상 국가
K-9 자주포, 천무	폴란드
K-2 전차	폴란드, 노르웨이
레드백 장갑차	호주
FA-50 전투기	○○○, ○○○

주: FA-50 전투기 관련 수출 대상 국가명은 수출업체 측 요청으로 비공개
자료: 방위사업청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관련 주요 대응

- (국정과제 수립) 정부는 2022년 7월에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으며, 국정목표 5번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에 106번 과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포함
  - (과제목표) 4차 산업 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고,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 (주요 내용) ①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②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③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④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 (기대효과)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비용 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

'국정과제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① 범정부 차원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②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③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④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자료: 방위사업청

- (절충교역 유망목록 확대)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국내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1]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유망목록」[2] 확대 및 정보 제공 온라인 전시관 구축(2022. 11. 15.)
  - 2022년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기존 목록 대비 참여기업 및 대상 품목이 103개사 724개 품목·기술로 확대되었으며,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하여 활용성 제고

  ※ 유망목록 지정 현황: 2020년 43개사 116개 품목, 2021년 20개사 47개사 품목 지정

  - 절충교역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에는 방산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유망목록 기업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계획

- (통합 수출지원 그룹 착수회의 개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통합 수출지원 그룹 착수회의 개최(2022. 9. 19.)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원활한 방산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폴란드 수출이 성사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
  - 무기체계별 별도의 팀이 폴란드 수출에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폴란드 군 한국 내 교육지원 및 계약 후속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논의

  ※ 무기체계별 별도의 팀('Team K2', 'Team K9', 'Team FA-50')은 관련 기관(국방부, 합참,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과 방위산업 업체로 구성됨

1)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 및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의미함. 무기 수입 시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로 국산무기 및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경우, 이는 해당 가치만큼 방산수출 확대로 직결될 수 있음

2)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다양한 국내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정보 및 대상품목, 기술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기 쉽게 목록화 한 것임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책 수립 관련 고려사항

-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무기체계 개발 시 작전적 요소는 필수사항으로 고려하지만 수출산업화 요인은 여전히 선택사항으로 고려하는 현행 무기획득 체계 개선 필요
  - 무기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시장 선점과 정부예산 절감 및 첨단기술 획득을 도모하고,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맞춤 전략 확대
- (첨단부문 무기체계 개발 투자 확대) 전 세계 무기 수요의 경우 첨단무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부문 무기체계 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전 세계 무기 수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첨단부문에 속하는 항공기 및 미사일로, 전통 부문에 속하는 기동화력, 함정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첨단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3)4)]
- (절충교역 성과 제고 필요) 무기 수입 시 일부 국가에 대한 절충교역 적용 제한 규정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절충교역 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절충교역 확보 비율 규정[5)] 강화 등의 검토 필요
  - 국내 방산 수입액이 과거(2012~2016년) 5년 대비 최근(2017~2021년) 5년에 1.7배만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확보가치(offset value) 실적[6)]은 10% 이하 수준으로 감소[7)8)]

행정예산분석과 김소연 예산분석관(02-6788-4643)

3) 2017~2021년 전 세계 무기별 수출 비중: 항공기 47%, 미사일 13%, 함정 13%, 기갑차량 10%, 화포 1,3% 등
4) 2017~2021년 전 세계 무기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함정 15%, 화포 39.7%, 항공기 0.7%, 기갑차량 0.3% 등
5) 수입 절충교역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규모(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외구매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비율은 기본계약금액 기준 경쟁사업의 경우 50% 이상, 비경쟁사업의 경우 30% 이상
6)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절충교역 지침」 제16조(가치평가)에 따라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등, 장비 및 공구 제공 등에 대해 인정된 평가가치에 가중치를 곱한 가치를 의미
7) 과거 및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액 추이: (2012~2016년) 3,309백만TIV, (2017~2021년) 5,644백만TIV
8) 과거 및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확보가치 실적: (2012~2016년) 7,970백만달러, (2017~2021년) 736백만달러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2022. 11. 23.)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0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

    *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2020.4.)에 따라 ① 적정가격 반영, ② 유형 · 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1월 수립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는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 · 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을 위해 부동산 유형 및 시세수준별로 매년 제고되는 현실화율*과 도달기간**을 상이하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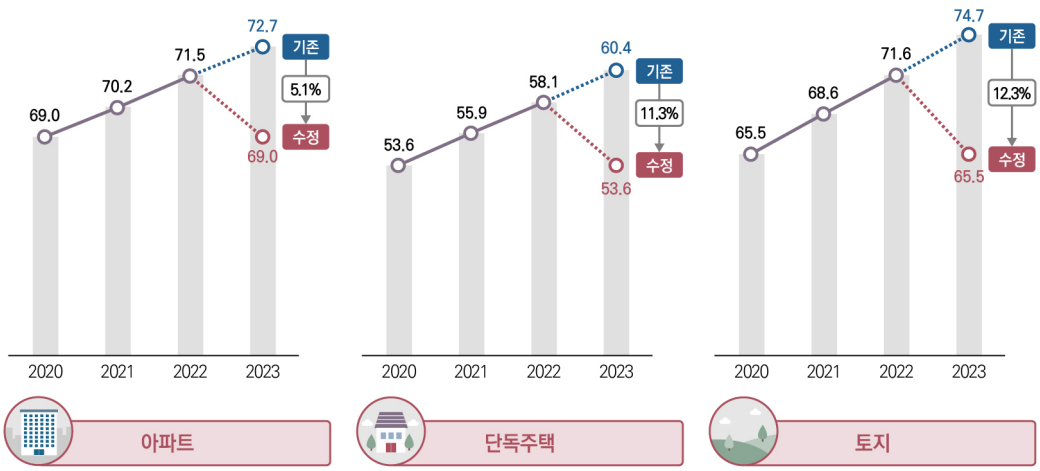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3년의 균형성 확보 기간 이후 목표 현실화율까지 매년 균일하게 높이고,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현황을 고려하여 시세수준별 목표 달성기간까지 매년 균일하게 높임

    ** [공동주택] (15억원 이상) 2025년, (9~15억원) 2027년, (9억원 미만) 2030년
    [단독주택] (15억원 이상) 2027년, (9~15억원) 2030년, (9억원 미만) 2035년
    [토지] (전체 토지) 2028년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주요 내용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20.11.)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짐
  -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낮춤
  -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주: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
  - ❶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021년, 20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수준(2021년 시세 9~15억)

현실화 계획 시행 전 · 후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시행 전	2011~2020년 연평균	3.02%	4.39%	4.66%
시행 후	2021년	19.05%	6.80%	10.35%
	2022년	17.20%	7.34%	10.17%

자료: 국토교통부

- ❷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 ❸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

2023년 공시가격	=	2022년 말 시세	x	2023년 현실화율(2020년 수준)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안태훈 예산분석관(02-6788-4747)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2022. 11. 3.)

- **(계획)** 10대 첨단 미래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 추진

  * ❶ 시스템반도체, ❷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❸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❹ 친환경·에너지, ❺ 로봇, ❻ 빅데이터·인공지능(AI), ❼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❽ 우주항공·해양, ❾ 차세대원전, ❿ 양자기술

  -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하여, **2023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 민·관 공동 자금 투입**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기금(펀드)' 신설, 해외자본을 유치할 '세계(글로벌) 기금(펀드)'은 2023년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

- **(배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 초격차 스타트업: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

  -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추진 중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의 인공지능전략(2019), Endliess Frontier Act(2021)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2021), (중국) 중국제조2025(2015), 신인프라투자(2020)

  - 신산업은 스타트업이 선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딥테크 기업*도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

    * 딥테크 기업: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이버보안, 전기·수소차, 5G+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며,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여 잠재력이 충분한 반면,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부족한 실정**

    ※ 2022년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이 23개 사로 증가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지속 성장 중이나 이중 딥테크 유니콘은 3곳에 불과

  - 업력 또는 기술·분야 제한 없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넘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정책 필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5년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약 **2조원의 자금**을 투입,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인 **사업화 및 기술개발, 후속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
  - **(사업화)** 민간투자 포함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지원
  - **(R&D)** 총 5,000억원 이상의 R&D 자금 집중 투입

    ※ (공모·추천형) 기업당 최대 3년간 6억원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최대 2년간 6억원 R&D 지원

    ※ (민간투자형) 기업당 최대 2억원+민간투자 3억원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최대 3년간 15억원 R&D 지원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참고 : 기술력 확보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지원수단 개요

	독보적 기술력 확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단계	사업화	R&D	후속지원
지원물량	1,000+개사	850개사 내외	상위 100개사
지원내용	최대 3년 2~6억원	최대 3년 3~15억원	최대 2년 10억원
5년간 민간투입	·공모·추천형 : 성장·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등 ·민간투자형 : 1,800억원(기업 평균 3억원 이상)		시리즈 B 이상 투자유치 : 5,000억원 이상
5년간 정부예산	7,200억원	5,000억원	1,000억원
직접지원	▶ (총규모) 2조원 = 민간(투자 6,800억원 + 성장·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등) 정부(사업화 7,200억원 + R&D 5천억원 + 스케일업 1,000억원) ▶ (기업당) 약 8억원(사업화·R&D) ~ 최대 31억원(사업화·R&D·스케일업)		
연계지원	▶ (펀 드)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조성 및 글로벌 펀드 확대 ▶ (정책자금)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지원 및 심사 간소화 ▶ (기술보증)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보증 및 조건 우대 ▶ (수출지원)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의 수출바우처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분야 선정 결과 및 유망 스타트업 선별 방안

- **(분야 선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상 신산업,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 및 글로벌 선점 가능성,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10개 분야 선정
  -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국내외 주요기관 공통 선정분야 등을 바탕으로 유사분야의 통합·편입 및 초격차 달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10개 분야 선정

    ※ 초격차 스타트업 10대 분야는 향후 기술·산업별 현황, 스타트업 생태계 등의 환경변화, 국가전략기술(과기정통부) 지정에 따라 평가 및 반영할 계획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결과

❶ 시스템반도체	❷ 바이오·헬스	❸ 미래 모빌리티	❹ 친환경·에너지	❺ 로봇
❻ 빅데이터·AI	❼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❽ 우주항공·해양	❾ 차세대원전	❿ 양자기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선별)** 2023년부터 5년간 1,000개 이상의 초격차 후보군을 3개 트랙으로 발굴
  -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을 공모하여 선발하고(공모형), 민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을 추천받아 선정하며(추천형), 팁스(TIPS)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선정(투자형)하는 3가지 방식을 활용

    * TIPS(Technology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투자, 멘토링, 보육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

스타트업 선별 방식

	공개 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딥테크팁스)
대상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추천하는 스타트업**	기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있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평가	▪ **기술평가** : 주관기관 등 ▪ **성장평**가 : VC 1) , 창업기획자	▪ 정책방향 부합성 ▪ 정책금융지원 결격요건 등	▪ **기술·사업성** ▪ **글로벌 진출 가능성**

주: 1) VC는 Venture Capital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전략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초격차 분야 변화 가능성 및 민간투자형의 경우 민간 주도 지원에 따른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기획 및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임길환 예산분석관(02-6788-3734)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발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발표 (2022. 10.)

- 2022년 10월 26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공식 출범하였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함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 2022.3.25. 시행) 제7조에 따라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비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로 수립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상황이며,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로 구성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등 3대 방향 및 11개 세부추진방안으로 구성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 내용

-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1)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 확대 및 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

- (산업구조 전환)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① 연·원료 → ② 공정 → ③ 제품 → ④ 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
-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

● (전략2)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술혁신·규제개선)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
- (핵심산업 육성)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
- (재정지원·투자확대)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

● (전략3)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 소비절감 및 국민실천)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
- (지방 중심 탄소중립)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도록 함
- (산업·일자리 전환)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직무훈련 및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

● (전략4)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적응기반 구축)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주체 모두가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
- (국제사회 선도)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이행관리)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

3대 정책방향, 4대 전략, 12대 과제

3대 정책방향

1 **책임있는 실천**: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2 **질서있는 전환**: 법과 절차의 준수,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중시
3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4대 전략 · 12대 과제	가.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나.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라.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12.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022.10.2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주요 내용

- 3대 방향별로 세부추진방안은 아래와 같음
- (기본방향 1)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우리나라의 특성(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하여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
- (민관협업 시스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도입하여 기술개발 효과성 제고

● (기본방향 2)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 강화

- (탄소중립 핵심기술 투자)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
- (예비타당성 신속화)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적 국제협력) 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

● (기본방향 3) 혁신적 기술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 (신속한 사업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 지원
-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있도록 지원
-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
-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하여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목표	기술 혁신을 통한 2030NDC 및 2050탄소중립 실현	
기본 방향	민간+임무 기획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 전략 고도화
	신속 유연한 투자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R&D 신속 투자
	기술혁신 기반조성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 방안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① 한국형 탄소중립 100 핵심기술 선정 ② 임무 중심의 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 ③ 민간 수요 반영을 위한 산학연 협업 시스템 구축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①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 체계 도입 ② 신속 유연한 예타 지원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③ 선도국 중심의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①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및 창업 촉진 ②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측정·검증 모델 개발 ③ 탄소중립 R&D와 연계한 선제적 제도·규제 개선 ④ 산학연 공동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⑤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2022.10.26.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면밀한 후속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함

※ 20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20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연도별로 감축수단별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배출량 대비)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은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

※ 주요국 NDC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 → 목표연도): (한국) 4.17, (EU) 1.98, (美) 2.81, (英) 2.81, (日) 3.5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태은 예산분석관(02-6788-4649)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보급 및 발전비중 확대라는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비용효율성,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생태계 등에서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진단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2017.12.)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 성과 창출
  -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7년 7,963억원에서 2021년 1조 6,382억원으로 2.1배 규모로 증가
  -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 2017년 1.9GW에서 2021년 4.2GW로 2.2배, 발전비중도 3.2%에서 6.3% 규모로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및 발전비중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GW)	1.9	3.2	4.1	4.9	4.2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3.2	3.6	4.4	5.6	6.3

주: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및 발전비중은 예상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22.11.을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소규모 태양광 중심 보급 등에 따른 낮은 비용효율성,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문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진단

정부에서 진단한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평가	주요 부작용 진단 내용
소규모 태양광 위주 보급	1MW 이하 소규모 위주 태양광발전 양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위법·부당사례 등 부정수급 발생, 한국형FIT·경쟁입찰 등을 통해 협동조합 태양광 과다 지원
급격한 사업허가 확대로 해상풍력 확대	풍황계측기 선점·난립, 모호한 허가우선순위와 과도한 인정범위 확대 해석으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 급속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과정에서 어민과의 갈등 확산
전력계통 및 유연성 자원 부담 초래	특정지역 편중 심화, 재생에너지 계통보강비용 증가와 접속지연에 따른 민원, RPS이행비용 등 비용부담 지속 확대, 예비력·유연성 자원 및 변동성 대응을 위한 계통보강 등 추가비용 발생
지속적인 주민 민원 발생	태양광 보급 확대로 농지잠식 및 농민 반발, 주민갈등처리 가이드라인 부재, 산지 태양광 확대로 산사태 등 사고 우려 증가,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로 사업 예측가능성 저하 및 사업자·주민간 갈등 심화

평가	주요 부작용 진단 내용
RE100 확산에 따른 이행 가능성 우려	글로벌 RE100 기업의 국내협력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블랙록·유럽연기금 등 투자자 ESG경영 요구 증가, 국내기업의 RE100 가입 확대로 재생에너지 공급량·비용 등 관련 우려 증가
취약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태양광의 경우 수입산 잠식, 산업생태계 취약, 풍력의 경우 시장형성 초기부터 수입산 중심 시장 잠식 확대, 바이오의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활용 부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22.11.을 바탕으로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 (2022. 11. 3.)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라는 비전 하에, 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② 비용효율적이고, ③ 계통 및 ④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⑤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등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 포함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5대 정책방향 및 16대 과제

정책방향	16대 과제 주요 내용
1 합리적·실현가능한 목표	• (재생에너지 목표재설정 및 원별 균형 보급)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수준으로 조정, 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따라 2023년부터 RPS 비율 하향 조정 등 •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풍황계측기 인·허가요건 및 허가취소 근거 마련, 입지발굴·지구지정 등 계획입지 방식 전환 등 • (기업의 RE100 지원) RE100기업 얼라이언스 구성,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협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지원, RE100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지원 등
2 비용효율적 보급	• (소규모·협동조합 인센티브 조정, 중대형 태양광 개발 촉진) 소규모 중심 태양광 REC 가중치 개편 및 협동조합 인센티브 조정, 한국형FIT 제도 연장 여부 결정 및 협동조합 대상 관련 인센티브 폐지 등 • (정부 사업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 범부처 TF 구성 및 확인 부실사례 전국 확대점검 실시, 적정수준으로 보조율 하향, 설계수명·계약기간 고려 REC 발급기한 설정 및 SMP 상한의 고정가격 제한 등 • (발전사업자 간 경쟁 촉진) 풍력 경쟁입찰 신규 도입, 중장기적으로 RPS제도 종료 및 경매제도로전환 등
3 계통수용성 제고	• (재생에너지 계통책임성 강화) 일정규모 이상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입찰 및 중앙급전 발전기와 동등책임 부여,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안정장치 부착의무 부여 등 • (계통수용성 기반 계획입지제도 도입) 계통여유 및 증설계획 지역을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 시범지역으로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요건 강화) 1MW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재검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수용 한계량 반영 및 허가 쿼터제 도입 검토 등
4 주민수용성 강화	•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유휴부지 활용 확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 지자체별 규정 차이를 보이는 이격거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산지태양광 설비 특별 안전대책 추진 등
5 국내산업 육성	• (태양광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최초 상용화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 검토 등 • (풍력산업 국내 밸류체인 고도화) 대형터빈, 핵심부품 등 핵심기술개발 가속화 및 국산화 등 •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국산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및 하수슬러지 등 활용기반 조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22.11.을 바탕으로 재구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하향조정에 따른 NDC 달성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정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2022.11.)을 발표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1]에서 21.6% 수준으로 하향 조정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조정: 20.8%(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2.) → 30.2%(NDC상향안, '21.10.) → 21.5%(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22.8.) → 21.6%(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2.11.)[2]
-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조정에 따른 NDC 달성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계획을 차기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30년 NDC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02-6788-4660)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 등에서의 감축목표 상향 검토를 통해 2021년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한 2030년 전원믹스 구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를 제시한 바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8. 및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22.1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2. 10. 26.)

- 정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상정·의결
  - (배경) 최근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 증대
  -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을 통해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정부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3대 추진방향 설정
  - **(희망 복원)**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
  -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 해소, 법·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

-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반영, 범부처차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등 5개 분야별 청년정책 마련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5대 추진 분야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계획」 세부 내용

- (일자리 분야) 민관협업 청년일자리지원,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기금(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주거 분야)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중심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 복원

- (교육 분야) 미래 산업 수요 대응 인재 양성, 교육비 부담 완화
  - 민간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 완화

- (복지·생활 분야) 청년의 든든한 미래 지원, 소외됨 없는 청년 복지 지원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
  - 취약청년 도약 지원 및 청년층 생활·문화 맞춤 지원

- (참여 분야)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청년으로 활기찬 지역
  - 청년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 청년이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청년정책 5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대 분야	내용	주요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자리	민관협업 청년일자리지원,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고용부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고용부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확대 운영	고용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고용부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고용부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중기부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중기부
		청년기업 특화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주거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중심 공공분양 공급 확대	국토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	금융위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금융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국토부
교육	미래 산업 수요 대응 인재 양성, 교육비 부담 완화	첨단산업 인재양성 집중 교육과정 제공(부트캠프)	교육부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지원	교육부
		분야별 인재 양성 주요 대책(SW/첨단디지털/미래에너지/콘텐츠)	관계부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교육부
복지·생활	청년의 든든한 미래 지원, 소외됨 없는 청년 복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
		병사 자산형성 지원(병사월급 205만원 보장)	국방부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부
		저소득층 청년 문화권 보장 강화	문체부
참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청년으로 활기찬 지역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국조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국조실
		청년마을 지원 확대	행안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는 청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① 공정기회 확산, ② 청년특화 추진체계 구축 노력
  - (공정기회 확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및 도약기회 보장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계획
  - (추진체계 구축)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특화 전담 연구기관 설치 및 재정조성방안 수립 검토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후속계획 수립 필요

-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것으로, 청년정책의 2023년 예산 및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2023년도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
  - 다만, 이번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1]에 의해 2020년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는 추진방향, 분야별 목표 및 과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과정에서의 혼란 최소화 및 일관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된 후속 정비 방안 마련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해인 예산분석관(02-6788-4648)

1)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2022. 7. 29.)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추진 방향은 상향식(Bottom-up)으로, 공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무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계획

공공기관 혁신 추진 체계

단 계	주 체	내 용
수립	각 공공기관	각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특성·여건을 반영한 혁신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부처에 제출
점검·조정	주무부처	주무부처에서는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 협의·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
점검·조정·확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혁신 T/F에서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주. 기획재정부 혁신 T/F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팀장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예산실 등이 참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7.29.)에서 재작성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세부 추진 방향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기능, 비핵심 업무, 포스트 코로나·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기능 등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추진
  -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을 목표로 제시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대 분야 중 예산·복리후생, 자산 부문에 대하여는 각각 '22년 10월, 11월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추후 기능 및 조직·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점검 및 주무부처 협의·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2022. 10. 17.)

●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대 분야 중 예산과 복리후생 부문에서의 개선 계획을 확정·발표

- 각 공공기관이 9월 8일까지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

● 예산효율화 계획은 경상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삭감 등 포함

-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는 10.2%(하반기 예산 7조원 중 7,142억원), 업무추진비는 15.9%(하반기 예산 393억원 중 63억원) 삭감
- 2023년 경상경비는 3.1%('23년도 예산 14조원 중 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23년도 예산 786억원 중 82억원) 삭감
- 세부적으로는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 예정이며, 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절감 추진 중

● 복리후생 개선 계획은 사내대출,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항목 개선 등 포함

-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실시
-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 수립

※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 기 준수 등 사유로 복리후생 개선 계획 미제출

- 향후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22년 말까지 357건(49.9%), '23년 상반기까지 77건(10.8%)을 이행할 계획

복리후생 혁신계획 결과

(단위: 건)

복리후생비 관련						여타 제도개선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학자금	102	문화여가비	33	의료비	22	창립기념일	161	휴직	27
경조사비	55	선택적 복지	32	보육비	3	사내대출	96	퇴직금	25
기념품비	40	행사지원비	27	기타	46	휴가	32	기타	14
합계					360	합계			355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0.17.)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2022. 11. 11.)

-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대 분야 중 자산 부문에서의 개선 계획을 확정·발표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
-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3조원 매각 및 출자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등 총 14.5조원 수준의 자산효율화 추진
  -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2조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나, 공공기관 혁신 T/F 논의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후 기관의견 수렴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 마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11.6조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하고,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89건(7천억원 규모)을 정비
- 그 외에 목적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2.2조원 규모)의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추후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

자산효율화 계획 결과

(단위: 건, 조원, %)

구 분	자산매각			지분정비	합 계
	부동산	부동산 外	소계		
건 수	330	189	519	275	794
금 액	11.6	0.7	12.3	2.2	14.5
(비중)	(80.0)	(4.8)	(84.8)	(15.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1.11.)

● 계획에 포함된 자산에 대하여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시에는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각 내규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22~'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

공공기관평가과 김민석 예산분석관(02-6788-4681)

해외재정동향

-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일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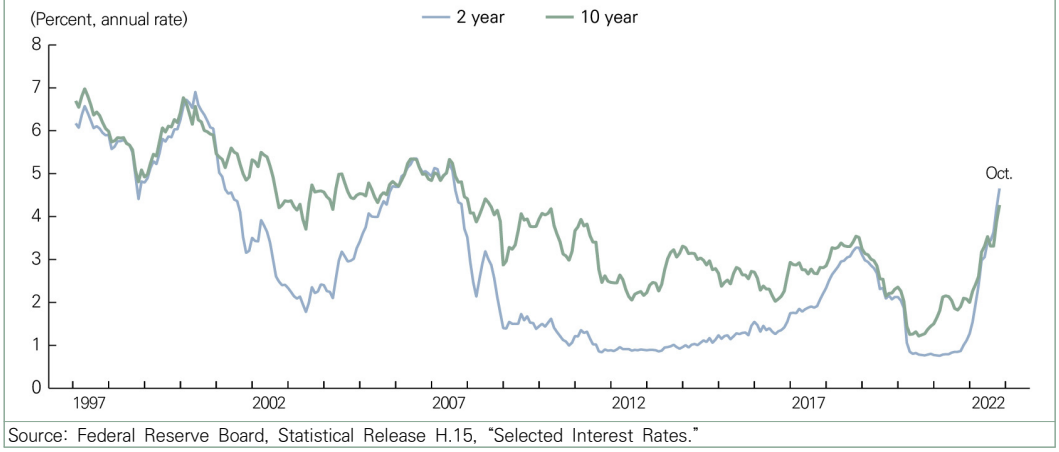
미 연준은 2022년 11월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높은 변동성 및 그에 따른 미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긴축통화정책의 여파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간프리미엄 등 국채 시장 내 경기전망 지표 악화
  - 국채 금리는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당시 수준 및 지난 25년(quarter-century) 평균 수준에 근접 또는 상회함(그림 1.1)
  - 반면, 장기물 국채 보유에 따른 상대적 보상을 의미하는 명목 국채 기간프리미엄(term-premium)은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그림 1.2)

※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과 같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장기금리는 미래 경제활동 기대 또는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해 반응함. 일반적으로 미래 경기를 호황으로 예측하는 경우 기간프리미엄은 확대되고, 향후 불황으로 전망하는 경우 기간 프리미엄은 감소

  - 옵션 가격에서 도출된 금리 변동성에 대한 예측 지표(forward-looking measure) 또한 최근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냄(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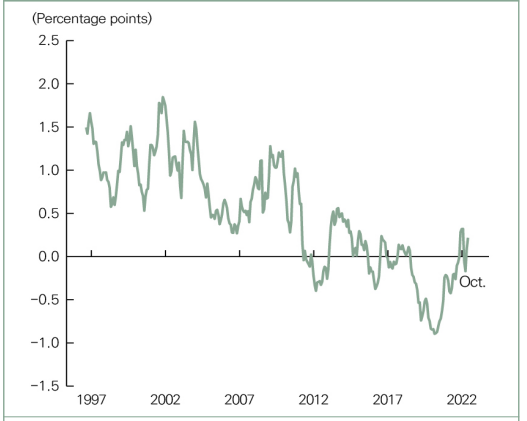
Figure 1.1 Nominal Treasury yields increased to levels seen before 2008



Source: Federal Reserve Board, Statistical Release H.15, "Selected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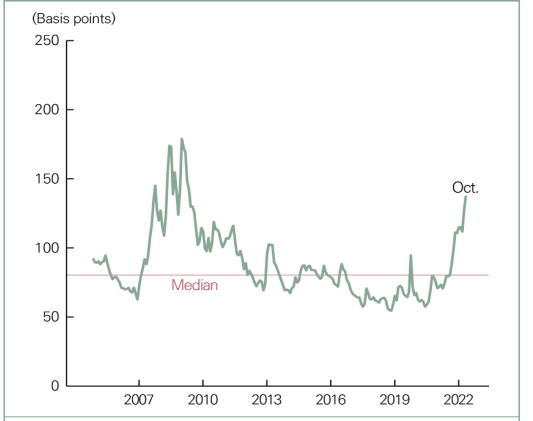
자료: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2022.11.

Figure 1.2 An estimate of the nominal Treasury term premium was low relative to its long-run history



Source: Department of the Treasury; Wolters Kluwer, Blue Chip Financial Forecast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ederal Reserve Board staff estimates.

Figure 1.3 Interest rate volatility increased amid heightened uncertai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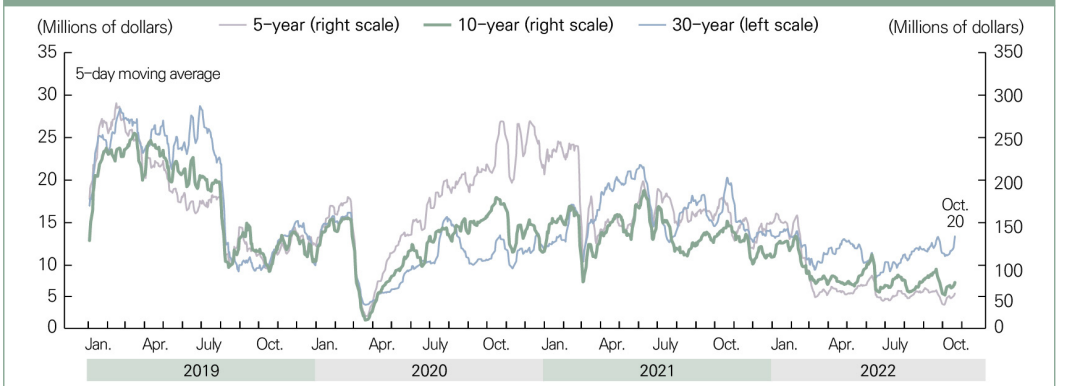


Source: ICAP, Swaptions and Interest Rate Caps and Floors Data.

자료: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2022.11.

-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미 국채시장의 유동성 관련 지표가 악화된 모습을 보임
  -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시장 깊이(market depth)[1] 등의 지표가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30년물은 2022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그림 1.4)
  -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채수요자들이 금리 변동성에 따른 국채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 예측 등으로 채권 수요를 이연(delay) 또는 소규모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Figure 1.4 Treasury market depth suggests liquidity remained below historical norms



Source: Inter Dealer Broker Community.

자료: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2022.11.

1) 시장 깊이(market depth)는 주어진 거래조건(posted bid and ask prices)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의 양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예상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화 긴축과 고물가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국채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 우려됨

- 미 국채시장 공급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채시장 규모가 급증함
  - '19년 말 $16.7조 → '22년 9월 $23.7조
- 금리 변동성에 따른 채권 수요 이연 외에도 연준의 양적 긴축(QT)으로 인해 국채 수요 감소
  - 연준의 국채 보유액은 2022년 6월 이후 $1,575억 감소
  - 달러화 강세 등에 따라 해외의 미국 국채 투자수요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약화됨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시장 불안정성은 국제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건전성이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높아짐

- 미 국채시장을 비롯한 회사채 시장 등 핵심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지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은 국채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국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비용을 높이는 등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음
  - 영국의 작은 예산(Minibudget)[2]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하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필요로 하는 재정정책이 발표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

예산분석총괄과 강지혜 예산분석관(02-6788-4626)

2) 2022년 9월 23일 영국 정부는 경제성장촉진을 목표로 5년간 매년 최대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포함한 작은 예산(minibudget)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은 자금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해당 정책 발표 이후 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중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10년물 기준 9월 22일 대비 74bp 상승한 4.2%)하고 파운드화가 급락(9월 22일, 미달러화 대비 4.9% 평가절하)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 취소안 등을 철회하는 등 재정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OECD, 2022년 11월 22일「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발표

-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 G20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1)]

세계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여,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2) 3.1%, (2023) 2.2%, (2024) 2.7%
  - 아시아가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G20 물가상승률 (2022) 8.1%, (2023) 6.0%, (2024) 5.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2~2023년 중 2%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2) 2.7%, (2023) 1.8%, (2024) 1.9%
  - 민간소비가 그간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경기 하강·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받을 전망
  - 물가는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2022) 5.2%, (2023) 3.9%, (2024) 2.3%

1) OECD는 일 년에 총 4회의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음. 이 중 2회는 5~6월과 11~12월에 세계경제, OECD회원국, G20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나머지 2회는 3월과 9월에 세계경제, G20 국가만을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함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OECD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및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
  -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
  -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우려
    - 저소득국가의 2/3가 이미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여건 긴축에 직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의 취약계층이 식량 수급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위험요인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에 대한 권고

-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
  -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에너지·식량 충격에 대응한 가계·기업 대상 재정지원은 선별적·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권고
  - 고용·생산성 촉진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무역 활성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팬데믹 상흔 최소화를 위한 기술투자 확대 등을 권고

-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
  -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

-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
-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

경제성장률 전망 (G20국가, 「2022.11월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전망시점		2022.9월	2022.11월	조정폭	2022.9월	2022.11월	조정폭	
전세계	**5.9**	**3.0**	**3.1**	**+0.1**	**2.2**	**2.2**	**0.0**	**2.7**
G20	**6.2**	**2.8**	**3.0**	**+0.2**	**2.2**	**2.2**	**0.0**	**2.7**
유로존	**5.3**	**3.1**	**3.3**	**+0.2**	**0.3**	**0.5**	**+0.2**	**1.4**
호주	4.9	4.1	4.0	△0.1	2.0	1.9	△0.1	1.6
캐나다	4.5	3.4	3.2	△0.2	1.5	1.0	△0.5	1.3
독일	2.6	1.2	1.8	+0.6	△0.7	△0.3	+0.4	1.5
프랑스	6.8	2.6	2.6	0.0	0.6	0.6	0.0	1.2
이탈리아	6.7	3.4	3.7	+0.3	0.4	0.2	△0.2	1.0
스페인	5.5	4.4	4.7	+0.3	1.5	1.3	△0.2	1.7
일본	1.6	1.6	1.6	0.0	1.4	1.8	+0.4	0.9
한국	**4.1**	**2.8**	**2.7**	**△0.1**	**2.2**	**1.8**	**△0.4**	**1.9**
멕시코	4.8	2.1	2.5	+0.4	1.5	1.6	+0.1	2.1
튀르키예	11.4	5.4	5.3	△0.1	3.0	3.0	0.0	3.4
영국	7.5	3.4	4.4	+1.0	0.0	△0.4	△0.4	0.2
미국	5.9	1.5	1.8	+0.3	0.5	0.5	0.0	1.0
아르헨티나	10.4	3.6	4.4	+0.8	0.4	0.5	+0.1	1.8
브라질	4.9	2.5	2.8	+0.3	0.8	1.2	+0.4	1.4
중국	8.1	3.2	3.3	+0.1	4.7	4.6	△0.1	4.1
인도	8.7	6.9	6.6	△0.3	5.7	5.7	0.0	6.9
인도네시아	3.7	5.0	5.3	+0.3	4.8	4.7	△0.1	5.1
러시아	4.7	△5.5	△3.9	+1.6	△4.5	△5.6	△1.1	△0.2
사우디	3.4	9.9	9.8	△0.1	6.0	5.0	△1.0	3.5
남아공	4.9	1.7	1.7	0.0	1.1	1.1	0.0	1.6

자료: 기획재정부(원자료: OECD)

물가상승률 전망 (G20국가, 「2022.11월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전망시점		2022.9월	2022.11월	조정폭	2022.9월	2022.11월	조정폭	
G20	**3.9**	**8.2**	**8.1**	**△0.1**	**6.6**	**6.0**	**△0.6**	**5.4**
유로존	**2.6**	**8.1**	**8.3**	**+0.2**	**6.2**	**6.8**	**+0.6**	**3.4**
호주	2.8	6.1	6.5	+0.4	4.4	4.5	+0.1	2.5
캐나다	3.4	6.9	6.8	△0.1	4.5	4.1	△0.4	2.4
독일	3.2	8.4	8.5	+0.1	7.5	8.0	+0.5	3.3
프랑스	2.1	5.9	5.9	0.0	5.8	5.7	△0.1	2.7
이탈리아	1.9	7.8	8.1	+0.3	4.7	6.5	+1.8	3.0
스페인	3.0	9.1	8.6	△0.5	5.0	4.8	△0.2	4.8
일본	△0.2	2.2	2.3	+0.1	2.0	2.0	0.0	1.7
한국	**2.5**	**5.2**	**5.2**	**0.0**	**3.9**	**3.9**	**0.0**	**2.3**
멕시코	5.7	7.9	8.0	+0.1	4.9	5.7	+0.8	3.3
튀르키예	19.6	71.0	73.2	+2.2	40.8	44.6	+3.8	42.1
영국	2.6	8.8	8.9	+0.1	5.9	6.6	+0.7	3.3
미국	4.0	6.2	6.2	0.0	3.4	3.5	+0.1	2.6
아르헨티나	50.9	92.0	92.0	0.0	83.0	83.0	0.0	60.0
브라질	8.3	10.8	8.9	△1.9	6.6	4.2	△2.4	4.5
중국	0.8	2.2	2.0	△0.2	3.1	2.2	△0.9	2.0
인도	5.5	6.7	6.9	+0.2	5.9	5.4	△0.5	4.4
인도네시아	1.6	4.1	4.2	+0.1	3.9	4.1	+0.2	2.5
러시아	6.7	13.9	13.9	0.0	6.8	6.7	△0.1	6.1
사우디	3.1	2.5	2.6	+0.1	3.2	3.2	0.0	2.3
남아공	4.6	6.7	6.6	△0.1	5.9	5.9	0.0	4.9

자료: 기획재정부(원자료: OECD)

행정예산분석과 최형수 예산분석관(02-6788-4642)

일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일본 국회는 물가상승, 엔화하락 대응 등을 위한 28.9조엔 규모의 2022회계연도[1] 제2회 추가경정예산[2]을 확정 (2022. 12. 2.)

- 일본 정부는 「고물가극복·경제재생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2022.10.28.)」을 실천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2년 11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2022.12.2.)
- 세출은 물가상승 및 임금대책 부문, 엔저(円低)를 활용한 지역 경제력 회복·강화 부문,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부문, 국민의 안전 확보 부문 등 총 28조 9,222억엔을 편성·확정
  - 이 중, 코로나-19, 원유가격 및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4조 7,400억엔 편성
- 세입은 공채금(公債金,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
- 2022회계연도 세출 규모는 139조 2,196억엔으로 증가
  - 본예산(107조 5,964억엔) + 제1회 추가경정예산(2조 7,010억엔) + 제2회 추가경정예산(28조 9,222억엔)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엔)

세출		세입	
부문	금액	부문	금액
물가상승 및 임금 대책	78,170	조세 및 인지수입 증액	31,240
엔저(円低)를 활용한 지역 경제력 회복·강화	34,863	기타 수입 증액	6,741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54,956	공채금	228,520
국민의 안전 확보	75,472	전년도 잉여금 수입	22,732
예비비(코로나-19, 원유가격, 물가상승 대응)	47,400	세입 수정 감액	△11
기타 경비	9,135		
기존 세출 감액	△10,774		
합계	289,222	합계	289,222

자료: 일본 재무성

1)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다.
2)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은 보정예산(補正豫算)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법」 제29조에 따라 ① 법률상·계약상 의무지출에 부족한 경비 보충, ② 예산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한 긴급경비 지출, ③ 채무부담 행위에 의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④ 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편성근거로 하고 있다.

물가상승, 엔화하락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전기요금대책비, 연료유가격 급변 완화조치비, 중소기업 등 사업재구축 촉진사업 등이 있음

- 물가상승 및 임금 대책 부문(7조 8,170억엔)
  - 에너지·식료품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대책비(24,870억엔), 연료유가격 급변 완화조치비(30,272억엔) 등을 편성
  -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재구축 촉진사업(7,800억엔), 임금 조달 지원사업(2,609억엔) 등을 편성
- 엔저(円低)를 활용한 지역 경제력 회복·강화 부문(3조 4,863억엔)
  - 코로나-19로부터 수요 회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산업 재생·고부가가치 사업(1,500억엔)을 편성
  - 엔저(円低)를 활용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첨단반도체생산기반정비사업(4,500억엔), 농수산물 수출확대사업(440억엔), 중요광물 공급망관리사업(2,158억엔) 등을 편성
-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부문(5조 4,956억엔)
  - 인력 투자 강화 및 성장분야로 인력이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재정 안정(7,276억엔), 이공계 전환 대학 기능강화사업(3,002억엔) 등을 편성
  - 성장분야에 대한 대담한 투자 촉진을 위해 바이오혁명추진사업(3,000억엔),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프로그램(2,500억엔), 창업촉진 에코시스템 추진(1,500억엔) 등을 편성
- 국민의 안전 확보 부문(7조 5,472억엔)
  - 신형 코로나 감염증 긴급포괄지원 교부금(15,189억엔), 백신 확보 및 접종체제 정비사업(12,072억엔), 신형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7,500억엔) 등을 편성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

(단위: 억엔)

부문	주요 사업
물가상승 및 임금 대책	• 전기요금대책비(24,870), 연료유가격 급변 완화조치비(30,272), 중소기업 등 사업재구축 촉진사업(7,800), 임금 조달 지원사업(2,609) 등을 편성
엔저(円低)를 활용한 지역 경제력 회복·강화	• 국내외 관광산업 재생·고부가가치 사업(1,500), 첨단반도체생산기반정비사업(4,500), 농수산물 수출확대사업(440), 중요광물 공급망관리사업(2,158) 등을 편성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 고용보험재정 안정(7,276), 이공계 전환 대학 기능강화사업(3,002), 바이오혁명추진사업(3,000),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프로그램(2,500), 창업촉진 에코시스템 추진(1,500) 등을 편성
국민의 안전 확보	• 신형 코로나 감염증 긴급포괄지원 교부금(15,189), 백신 확보 및 접종체제 정비사업(12,072), 신형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7,500) 등을 편성

주: 주요 사업에는 대표적인 것을 명시하였고 괄호안은 사업비임
자료: 일본 재무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채의존도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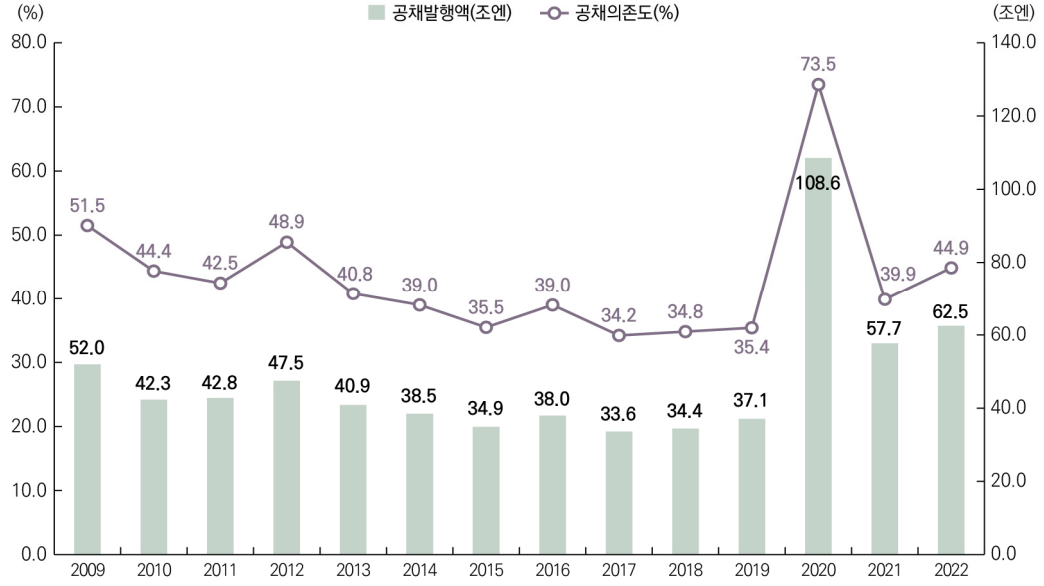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015.6.)」및「신 경제·재정재생계획(2018.6)」등을 발표하면서 세출개혁 대책을 지속하고 세입재원 중 공채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이었음
  -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PB) 흑자를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고령화에 따른 증가 수준으로 제한하고, 비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세출개혁을 지속

※ 공채의존도: 세입재원 중 국채발행(공채금)의 비중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정책적 경비)를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

- 공채의존도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34.3%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채를 22.9조엔 추가로 발행하면서 44.9%로 증가
  - 중장기적으로 공채의존도는 2009년 51.5%에서 2019년 35.4%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가 추세

공채발행액 및 공채의존도 추이



주: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1년 및 2022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변재연 예산분석관(02-6788-4663)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 3 통권 제21호

발 행 일	2022년 12월 23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 국회예산정책처, 2022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